

저소득 국가에서의 난민과 노동시장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에 접어들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난민 문제가 국내 정치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면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됨에 따라 유럽연합 전체가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에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과 빈곤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행렬이 미국을 향하면서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접경 지역에 대규모 장벽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주변국들의 정치적 안정으로 난민이 발생하거나 국경 내로 유입되는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예멘 난민 500여 명을 수용한 사례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일부를 특별기여자로 입국시킨 경우를 통해 국내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난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자국 내의 분쟁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인접국에서 발생한 난민이 소요 및 불안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 유입되기도 한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예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대규모 난민 집단은 경제·사회적으로 보다 안정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난민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던 지역에서도 각종 소요나 범죄 및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경제 전체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국가가 급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난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 조선시대에 경술·신해 대기근, 속칭 경신대기근이 있었던 1670년과

1671년 두 해에 걸쳐 전국적인 흉작으로 대규모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난민이 나타났다. 당시 아사 직전의 유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한성의 진흙소를 향해 각지의 난민이 모여들어 서울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였으며, 서울에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사자가 발생하여 관원들이 사망한데다가 서울을 탈출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행정 공백이 발생하였다. 당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니 목불인견이었을 당시의 참상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시리아 내전은 인접국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유럽에 대규모로 난민이 유입된, 여전히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리아에서는 2012년부터 대규모 내전이 발생하여 경제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피난을 떠났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특히나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정책이 선거와 국내 정치의 주요 이슈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서 난민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할당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중해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동유럽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서 그간 난민 유입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가 부각되면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난민의 규모가 전체 인구 대비 소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대규모 난민이 단기간에 유입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와 노동시장에는 큰 충격이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소수의 고학력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과 다수의 저학력에 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국경을 넘어 생활 기반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인 통행료나 항공료가 필요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초기의 생활비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정한 수준의 자산이나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경제적 소요에도 불구하고 쉽게 삶의 터전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유럽행 지중해 난민들처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동할 경우 이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데, 브로커들은 최대한 많은 난민을 배를 비롯한 이동수단에 태움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난민 1인당 이전 비용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저소득·저학력에 자산이 적은 사람들도 난민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난민이 유입되면 이들은 당장의 호구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도 일하려 한다. 결국 저학력·저숙련 직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자국민보다 난민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국민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안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증가 및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 증대를 불러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발생한 보트 피플로 대변되는 난민을 일부 수용한 경험을 제외하면 난민 신청자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사람이 소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중동 지역에서 여러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동해를 거쳐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동아시아에서 전쟁이나 내부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도 없으며, 한국 역시 내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자면, 많은 난민이 유입되고 나서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후에야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만시지탄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규모 난민이 국경 밖에서 유입되거나 혹은 자국에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고 난민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국 내의 내전이나 인접 국가에서의 전쟁 등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거나 유입된 저소득 국가 세 곳에서 난민이 특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레바논에서는 자국 내 분쟁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시리아로부터 많은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대규모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군과

반군 간에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이 사례를 통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전쟁 이후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생성된 국가로, 여전히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구성국들 간의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전으로까지 비화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 발생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들 세 나라의 사례가 향후 발생할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KLI**